

언론중재법·604조 슈퍼 예산 뜨거운 공방 펼 듯

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100일간 예산·입법 전쟁 예고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률·예산안 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 정국 주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27일을 '데데이'로 천명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다잡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친 뒤 오는 10월 초 30일 이내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영욱 우려에 '속도조절'을 했던 언론중재법의 처

리를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여당의 독주'로 규정하고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침으로써 실정론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아내고 국정 성과를 드러냄으로써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을 둘러싸고도 합여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절리내겠다며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도 우려된다.

관심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모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 절차를 한 템포 늦춘데 따른 강경파의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각종 개혁 방안을 보장해서 밀어붙임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태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9월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했다. 명확히 처리기한을 확정한 것"이라며 "순연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다. 더 농밀하고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야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언

론중재법안의 원 취지를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정에 대한 '낙장불일' 의지를 드러내며 초강경 태세를 갖추는데는 언론중

재법 통과 지연된 데 대한 당내 강경파와 열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대선 경선룰 '역선택' 갈등 악화일로

최재형·윤석열 역선택 방지 찬성 홍준표·유승민 반대...사생결단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룰 갈등이 악화일로다. 범여권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대선주자들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어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선 형국이다. 선관위 내부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갈등의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는 지지 정당을 묻는 방식 대신에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가'라는 조항을 중재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조사와 관련 조항이 없는 조사를 각각 진행해 합산하는 방식, 1차와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

안도 중재 카드로 거론된다.

대선주자 간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정할 때 상대 당을 지지한다고 명백히 밝힌 분들에게 선택권을 쥐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원하는 권성동 의원에 라디오에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제 본선에 가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 선정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본인은 이날 '선관위가 역선택 방지를 도입하지 않아도 따를 것인 가'라는 기자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경선에 한 번도 도입하지 않던 상식에 어긋나는 반쪽 여론조사 도입 시도는 이제 관두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겨냥해 "특정 후보 편들기 시도는 경선 파탄을 불러오고 이적행위로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중재안에 대해 "저는 경선위 안을 토씨 하나 고치지 말라고 했다"며 "변칙적인 절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 캠프의 오신환 상황실장은 라디오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내가 (여론조사 대상인) 1000명 안에 들어갈지도 모르니 약한 후보를 뽑자'고 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윤 "두테르테인가" 흥 "당신이 두테르테 文의 하수인"

홍악법 사형 언급 놓고 논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설전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소환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영아 강간·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언급한 홍준표 의원을 두테르테 대통령에 빗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뒤 '홍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과 관련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홍악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홍악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

통령은 그 문제를 잘 파악해 국회와 협조해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나를 두테르테에 비유한 것은 옳"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를 지시하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벼락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특수4부까지 동원해 우리 진영 사람 1000여명을 무차별 수사에 200여명을 구속했다"며 "5명을 자살케 한 분"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확정된 홍악법 사형수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뜬금없이 나를 두테르테에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것은 변지수가 틀러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주 임종성 의원 코로나 확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임 의원의 확진에 따라 국회 내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는 민주당 이계호·안규백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이어 4번째 확진자다. 임 의원은 전날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추가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편 외교부도 인도 외무차관 방한을 계기로 1일 개최하려고 한 양국 외교차관 대화가 인도 측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당일 취소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종건 1차관과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동아시아 외무차관의 제5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대화가 취소됐다.

후에 예정됐던 다스 차관의 정의용 장관 접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스 차관이 방한 기간 만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오전 확인됐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말로만 "윤희숙 사표 처리할 것"

여야 원내대표가 1일 일제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다만 윤 의원 사퇴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실제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윤 의원 사직안에 대해 "저희가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표결처리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앞서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선언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대응 필요성을 일축해온 것에서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사직안 처리에 입을 모았지만, 정기국회 내 어느 시점에 실제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병석 국회

의장은 사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 등 쟁점이 산적한 원내 상황을 고려하면 상정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수당으로서 사퇴안 가결 여부를 키를 쥐는 민주당의 내부 고민도 여전하다.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곤욕을 치러온 마당에, 자칫 윤 의원 사퇴를 몰아붙였다가는 '내로남불' 비판의 역풍을 다시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 본인은 이날 국회의원의회의 의원실 공간을 비우는 배수진을 치는 등 대어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p>1) 40평(전용) 2억3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한,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임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문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